

KBA 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 WEEKLY BRIEFING

2022.3.14 – 3.18

VOL.304

CONTENTS

I EU TRADE POLICY

- ▶3.14 EU 정상회의, 통상 및 에너지 분야 중심 4차 對러시아 제재 합의
- ▶3.14 전쟁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 확산...EU 전쟁 대응 농식품 전략 발표 예정
- ▶3.14 EU 업계, 전쟁 영향 대응 통상정책 방향 전환 촉구
- ▶3.15 EU 이사회, CBAM 이사회 타협안 승인...하반기 유럽의회와 협상 개시 전망
- ▶3.15 EU, 상품 가치 300유로 이상 사치품의 對러시아 수출 금지
- ▶3.15 EU 이사회, 공공조달 상호주의 목적의 국제조달규정 (IPI) 최종 합의
- ▶3.15 MWC 2022로 알아본 미래 디지털 기술 트렌드
- ▶3.16 EU, 미국 등 4개국, 코로나19 백신 특허면제에 합의
- ▶3.16 EU,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 발표
- ▶3.17 EU, 중국의 우회 보조금 차단 위해 인도네시아 일부 철강에 상계관세 부과
- ▶3.17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동차 부품 공급난 가중...업계 생산 조절 등 대응
- ▶3.18 EU, 철강 세이프가드 국별 쿼터 재조정...세이프가드 재검토에는 영향 없어
- ▶3.18 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 ▶[공제] 마그레브 경제사절단 모집 안내(파견기간 2022.5.24.-27)

II EU 환경규제 뉴스 -KIST EUROPE 제공

- ▶3.18 안면 마스크 내 이산화티타늄 입자에 대한 규제 조치 촉구
- ▶3.18 산업계, '저우려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성평가(CSA) 확대적용 비판

① EU 정상회의, 통상 및 에너지 분야 중심 4차 對러시아 제재 합의

● EU 정상회의는 11일(금) 통상, 에너지 섹터 중심의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합의

-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내용은 금주 초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품목 수출입금지, 러시아 에너지 투자 금지 등 통상 및 에너지 섹터에 집중
- 최근 G7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 IMF 및 세계은행 금융 접근 제한에 합의한 가운데, EU도 이에 맞춰 통상분야 제재에 동참
- [사치품 수출금지] 주로 러시아 엘리트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제재조치로, EU의 일부 사치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
- [철, 철강 수입금지] 러시아로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핵심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
- [가상자산 규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엘리트들의 가상자산을 통한 제재조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
- [러시아 에너지 섹터 투자금지] 러시아 에너지 탐사 및 채굴과 관련한 모든 투자, 기술이전, 금융서비스를 금지
- 다만,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것에 비해, 에너지 섹터와 관련한 EU의 제재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

② 전쟁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 확산...EU 전쟁 대응 농식품 전략 발표 예정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국가 차원의 곡물 사재기가 발생하는 등 향후 글로벌 식량안보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EU의 식품 분야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

- 글로벌 밀 생산 점유율 30%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전쟁 및 제재조치로 사실상 중단되고, 터키, 헝가리,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자국 비축을 위해 수출을 제한, EU,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식량안보 우려가 고조
- 또한, 전 세계 밀 재고의 절반을 비축하고 있는 중국도 추가 비축 확보에 나서는 등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미국 등 G7 회원국은 사재기가 식량안보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각국에 비축 경쟁 및 수출금지 자제를 촉구

- 미국 정부관계자는 전쟁으로 인한 식량 및 사료 공급 교란은 아프리카, 중동 등 식량 사정을 악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이 막대한 식량 비축고를 아프리카 및 중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 한편,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농식품 분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당초 농식품 분야 주요 초점을 '저렴한 식량 공급 및 안정적 농가 수입 보장'에서,

- '농식품 가격 급등 및 안정적 비료 공급망 확보'와 대외적으로 북아프리카, 중동 및 기타 지역의 식량안보 불안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완화 등으로 전환할 전망

③ EU 업계, 전쟁 영향 대응 통상정책 방향 전환 촉구

- EU 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및 운송비용 급등, 에너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영향 제어를 위한 통상정책 전환을 촉구

- 유럽 기술산업협회 올가림(Orgalim) 및 유럽 최대 업계단체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현실에 놓였음을 강조,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촉구

- [원자재]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철강 수입 중단 위기 속에 대체 공급원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철강 셰이프가드의 유지는 비합리적인 조치이며, 이의 재검토가 필요

- [통관 절차 간소화] 전염병 사태로 이미 통관지연이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 및 제재조치 발동으로 인한 추가적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가 필요

- [무역협정 확대] 전염병 및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메르코수르, 칠레 등과의 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

④ EU 이사회, CBAM 이사회 타협안 승인... 하반기 유럽의회와 협상 개시 전망

- EU 재무장관이사회는 15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관련 최종 입장을 확정

- EU 이사회 의장국 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CBAM 법안을 적극 추진중인 프랑스는 지난 주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CBAM 타협안을 제안, EU 이사회 상주 대표부 대사회의(COREPER)가 9일(수) 타협안에 합의한바 있음

- EU 재무장관이사회가 15일(화) CBAM 이사회 타협안을 최종 승인, 6월 유럽의회 본회의가 의회 법안을 확정하면 하반기부터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법안이 확정됨
- 다만, 일부 핵심 쟁점은 부칙(annex)에 별도로 규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협상은 하반기 CBAM 본 협상 개시 이전에 다뤄질 수도 있을 전망
- EU 이사회 타협안은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향후 유럽의회와의 협상에서는 CBAM 수익의 사용, 무료할당 폐지, 수출환급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
- 한편, 비즈니스유럽 등 업계단체는 무료할당 폐지에 대한 과도기간 부여 등 CBAM 도입에 신중한 접근 및 (전쟁 등) 사정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

⑤ EU, 상품 가치 300유로 이상 사치품의 對러시아 수출 금지

- EU 이사회는 15일(화) 지난 주 EU 정상회의가 합의한 사치품, 철강 등 수출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對러시아 4차 제재조치 세부내용을 확정
- 사치품과 관련 300유로 이상의 캐비어, 일부 와인, 시가, 가죽 가방, 다이아몬드, 일부 전자제품, 일부 악기, 당구와 볼링 장비 등 광범위한 사치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
- 또한, 일부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 러시아 정부로의 자금 유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품목은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황
- 다만,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철 및 철강 가운데 일부 핵심(key) 품목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 초기 철강 수입금지의 대상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
- 2020년 러시아산 철강 수입국 순위는 터키, 대만, 벨라루스 순이며, EU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가 6.8억 달러를 수입, 러시아 철강 6위 수입국에 위치
- EU는 러시아 대외수출 철강의 17.78%, 금액기준으로 약 40억 유로를 수입하고 있으며, EU의 전체 철강 수입 가운데 러시아 철강의 비중은 약 15% 수준

⑥ EU 이사회, 공공조달 상호주의 목적의 국제조달규정(IPI) 최종 합의

- EU 이사회가 14일(월) 의장국 프랑스의 공공조달시장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공공조달규정(IPI) 타협안에 최종 합의,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식 승인 후 발효 예정
- IPI 규정은 EU 기업에 자국 공공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제3국 소속 기업의 EU 조달사업 입찰시 불이익 부여 또는 입찰 제한 등 상호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것

- EU 집행위는 2012년, 2016년 2회에 걸쳐 법안을 발의했으나, 북유럽 회원국 및 독일이 교역상대국의 반발을 초래할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반대, 무산된 바 있음
-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확대, 미국 공공조달 사업 관련 'Buy American' 규정 등 영향으로 상호주의 관철 여론이 확산되자, 작년 EU 이사회가 IPI 규정에 합의

● [회원국의 집행위 결정 거부권]

- IPI 규정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조달사업과 관련한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한 회원국의 거부권 여부로, 유럽의회의 요구에 따라 법안은 회원국의 거부권을 불허
- EU 이사회는 집행위 결정 이행으로 불균형적인 가격상승이 우려될 경우, 집행위 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음

● [개발도상국 등 면제]

- 유럽의회는 EU의 일반특혜관세(GSP) 대상 모든 국가에 IPI 규정 적용면제를 요구하였으나, 법안의 실효성 훼손을 우려한 EU 이사회에 반대로 이번 법안에서는 '최빈국'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향후 면제 범위 확대를 집행위가 검토하는 데 합의

● [IPI 적용 대상 조달사업 범위]

- 법안은 1,500만 유로 이상의 인프라 구축 등 도급계약, 500만 유로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납품 계약에 대해 적용

⑦ MWC 2022로 알아본 미래 디지털 기술 트렌드

-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Mobile World Congress)가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Fira Barcelona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전시의 주제는 연결성의 촉발(Connectivity Unleashed)로 모바일 기술 발전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융합의 주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기업은 연결성의 핵심 기술인 ▲ 5G, ▲ 클라우드, ▲ 사물인터넷(IoT), ▲ 인공지능(AI), ▲ 핀테크(FinTech), ▲ 테크 호라이즌(Tech Horizon)에 주목하고 이 모든 기술과 디바이스의 합종연횡으로 펼쳐질 메타버스와 로봇이 대중화된 미래 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알아본 글로벌 디지털 기술의 트렌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우리 디지털 기업과 공유하고자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⑧ EU, 미국 등 4개국, 코로나19 백신 특허면제에 합의

● EU,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 등 4개국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에 합의

- 주요 합의 내용에 따라, 2021년 전 세계 백신 수출량이 10% 미만인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백신 특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고, 생산된 백신을 조건이 충족하는 국가에 수출할 수 있게 됨
- 합의에 따른 특허면제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에 한정되나, 각 참가국은 백신 특허면제 후 6개월 이내 특허면제 대상을 치료 및 진단 의약품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
- 또한, 각국은 특허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행정명령, 긴급명령, 사법부 판결·명령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백신 특허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점이 이른바 '강제면허제도(compulsory licensing)'와 다른 점으로 평가됨
- 백신 특허면제 합의에는 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의 동기가 필요한 가운데, 이번 합의가 WTO 백신 특허면제 합의로 이어질지 주목됨
- 이번 합의와 관련, 특허면제가 코로나19 백신에 제한된 점, 강제면허(compulsory licensing)의 활용으로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 비판도 제기

⑨ EU,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 발표

● EU는 15일(화) 상품 수출입 및 에너지 분야 대상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를 발표

* 수출금지 대상 사치품과 철강 등의 세부 리스트는 KBA Europe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클릭)

● [고가 사치품 수출금지]

- 판매가격 300유로 이상인 고가 패션, 보석, 와인, 주류 등 사치품 및 50,000유로 이상 자동차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 부유한 엘리트층을 타겟으로 제재
- 제재 대상 품목의 2021년 수출액은 약 35억 유로 수준이며, EU는 북한과 시리아에 대해 유사한 제재를 시행중이나, 러시아 중산층 보호를 위해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

●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지]

- 러시아의 석탄·가스·원유 탐사 및 생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Rosneft, Gazpromneft 및 Transneft 3사를 포함한 12개 원유 생산 또는 운송 회사와 거래를 금지

- 다만, 이번 에너지 분야 제재에는 EU의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과 원자력 기술 및 생산 등은 제외
- 이번 제재로 주로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업스트림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며, 작년 990억 유로에 달한 EU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은 계속해서 유지될

● [러시아 철강 수입금지]

- EU는 품목별 제재로 2021년 33억 유로를 기록한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금지, 3개월 유예기간 후 적용. (러시아 철강 수출 가운데 EU 수출의 비중은 약 25% 수준)
- EU 집행위는 수입금지 조치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회원국간 쿼터 할당량 조정을 제안 방침이며, 글로벌 철강 공급량도 충분, 대체 수입처 확보는 용이할 것으로 전망

● [WTO 최혜국대우 박탈]

-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 EU 및 G7 회원국*은 15일(화)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하는데 합의

* 한국,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EU 및 G7 등

- 최혜국대우는 WTO 회원국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의 조치라는 평가
- 특히,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달리, 최혜국대우 박탈시 자동으로 적용될 관세율이 없는 EU 등은 별도의 개별적 품목별 조치를 시행해야 함
- 다만, 이번 합의는 참가국이 '러시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정지하는 등 필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합의, 최혜국대우 박탈 등 최종 결정은 각국의 자율적인 결정에 유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협력하고 있는 벨라루스는 1993년 이후 WTO 가입을 추진 중이나 아직 가입하지 못한 상태로, 원천적으로 최혜국대우 대상이 아님

● [5차 러시아 제재조치]

- EU가 5차 러시아 제재조치도 검토 중인 가운데 제재 강도와 관련한 회원국간 이견이 드러남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재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추가 제재를 요구, 이에 대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적극적인 반면 독일 등 상당수 회원국은 신중한 입장

- 18일(금) EU 이사회는 제재조치 시행 현황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24~25일 EU 정상회의에서 추가 제재안 합의 및 회원국 간 의견 일치 여부가 주목됨

⑩ EU, 중국의 우회 보조금 차단 위해 인도네시아 일부 철강에 상계관세 부과

- EU 집행위는 16일(수) 인도 및 인도네시아산 냉연 평판 스테인리스 철강에 대해 각각 7.5%와 21%의 상계관세를 부과
 - 집행위는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체결한 양자간 특혜 무역협정에 따라, 스테인리스 철강의 원재료인 니켈광석(nickel ore)의 對EU 수출을 중단하고, 보조금으로 생산된 철강을 EU에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 상계관세 부과를 단행
 - EU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대해 작년 11월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이번에 상계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점은 3월 17일(목)
- 중국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우회를 위해 일대일로 참가국에 대한 투자 형식을 차용한 복잡한 우회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EU는 이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
 - 앞서 EU 집행위는 2020년 6월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이집트 유리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를 보조금으로 판정, 10.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한편, 인도에 대한 상계관세는 인도 정부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대한 것으로, 중국의 우회 보조금과는 관계가 없음

⑪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동차 부품 공급난 가중...업계 생산 조절 등 대응

- 코로나19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EU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이 주목됨
- [와이어 하네스 공급난]
 - EU의 전체 수입 가운데 對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의 약 7~11%를 차지하는 와이어 하네스*는 전쟁 이전부터 발생한 공급난으로 업계가 이미 대체 공급처를 모색하던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해당 품목 공급난이 악화
 - * 차량 당 총 5km에 달하는 와이어와 터미널, 커넥터 등의 세트로 차량 각 부품을 연결, 정보와 전력 등을 공급하는 부품으로, EU 자동차부품 업체 가운데 7개 업체가 우크라이나에, 30개 업체가 러시아에 생산공장을 두어 있어,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예상됨

- 유럽자동차부품협회(CLEPA)에 따르면, 현재 와이어 하네스 대체 공급처로 북아프리카(모로코, 튀니지), 발칸반도(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
- 또한, 장기적인 반도체 공급 불안,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과 함께 중요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생산 차질 등 자동차 업계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완성차 업체의 대응]

- (스즈키) 헝가리 Esztergom 소재 스즈키 공장은 연간 수출량 10%에 해당하는 對러시아 자동차 수출을 중단하고 타 지역 판매로 전환, 현행 공장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나, 향후 상황 악화시 생산 물량 감축 등 추가 조치를 검토
- (메르세데스-벤츠) 헝가리 Kecskemét 소재 메르세데스-벤츠는 공급망 위기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헝가리 소재 공장간 생산량 이전 등 생산량 조절을 통해 부품 공급난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
- (BMW) BMW는 2025년 헝가리 Debrecen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아우디) 헝가리 Győr 소재 아우디 공장은 전쟁으로 부품 공급망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17일(목) 발표할 예정
- (폭스바겐) 폭스바겐 슬로바키아 공장은 서부 우크라이나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어, 전쟁의 영향으로 생산 조절이 불가피
- (다치아) 루마니아의 다치아는 러시아 르노 자동차 공장의 기어박스 주문 감소로 지난 월요일 이후 수일간 생산을 중단
- (르노) 전쟁은 중부유럽을 넘어 서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르노의 프랑스 Cléon 공장은 우크라이나 등지의 부품 공급 부족으로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엔진 생산 차질이 다른 공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이전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이탈리아 Melfi 공장은 15일(화) 증산 계획 중단 및 4월 조업 단축 방침을 발표, 1일 약 1,500대 생산 감소를 예상

● 슬로바키아 정부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상승, 투자 감소 및 인플레이션 등과 함께 전쟁이 향후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산업 지형 변화의 촉매가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첨단 기술상품 제조를 위한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서 소싱 및 역내 생산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

- 체코 자동차산업은 자국 전체 GDP의 9%를 담당, 전쟁으로 인한 자동차산업 위축은 체코 경제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전망

- 최근 체코 자동차협회 설문조사에서 50% 이상이 체코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1/3 이상이 원자재·부품 공급 부족을, 1/5 기업이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

⑫ EU, 철강 세이프가드 국별 쿼터 재조정...세이프가드 재검토에는 영향 없어

- EU 집행위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철강제품 수입금지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국별 관세할당(TRQ) 쿼터 재조정 내역을 발표 *구체적인 조정 내역은 KBA Europe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클릭)

-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부여된 국별 쿼터를 동일 카테고리 품목 수출국에 비율에 따라 분배, 수입량 감소의 공백을 보완할 방침이며, EU 철강업계는 집행위의 신속한 쿼터 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

* 사례 예시 : 철강 품목 카테고리 X에 대한 러시아의 쿼터가 연간 백만 톤이고, 2021년 EU의 카테고리 X 전체 수입에서 제3국 A와 B의 비중이 각각 35%, 20%인 경우, A와 B는 각각 35만 톤과 20만 톤의 추가 쿼터를 배정받게 됨

- 철강 수입금지 제재에 따라, EU 수입업체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3개월의 전환기간 이내에 종료해야 하며, 신규 계약의 체결은 금지됨
- 수입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계약 기준일은 러시아 3월 2일, 벨라루스 3월 16일로, 해당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상품은 전환기간 중 EU로의 수입이 허용됨
- 집행위는 2021년 수입 실적에 기초한 배분을 통해 역내 철강제품 수요에 맞게 쿼터를 재분배하고, 세관의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

- 한편, 집행위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철강제품 수입금지가 현재 진행 중인 EU 철강 세이프가드 재검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

- 집행위는 작년 12월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재검토를 실시중이며, 빠르면 4~5월 경 각 회원국에 검토 결과를 회람할 예정
- 집행위는 작년 세이프가드 연장의 근거로 '미국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른 철강 관세 및 이에 따른 EU로의 철강 유입'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을 강조한 바 있음
- 다만, 이후 EU와 미국이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글로벌 합의'를 통해 EU가 對미 수출쿼터를 수용, 섹션 232 철강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상황이 변화했다는 지적

13 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
 -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
 -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
 -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
 -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함
 -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함

14 마그레브 경제사절단 모집 안내(파견기간 2022.5.24-27)

- 한국무역협회는 주튀니지대사관과 공동으로 국내 기업의 마그레브 시장 진출 지원 및 민간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마그레브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절단은 현지 및 아프리카 유력 경제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기업인 간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튀니지-아프리카 라운드테이블과 부대행사 등에 참여할 계획이오니 동 사절단에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II

EU 환경규제 뉴스 - KIST EUROPE 제공

① ECHA, 소방용 소화약제 내 모든 PFAS 물질 사용금지 제안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월 23일, 소방용 소화약제(또는 발포제)에 포함된 모든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에 대한 EU 차원의 제한(restriction)조치를 제안하였다.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② EUON, '나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방법'에 관한 Nanopinion 발행

- EUON(유럽나노물질관측소)는 2월 24일, '나노플라스틱은 유해한가? 위해성 평가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전문가 기고(나노오피니언, Nanopinion)*를 게재하였다. 저자들은 해당 기고에서 위해성 평가의 불확실성 저감을 위해 향후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나노플라스틱 물성(property) 평가 기준을 정의하였다.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